

# “국정·내각 전면 쇠신해야”

### ■ 정세균 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 ‘5+2 광역경제권’ 추진 즉각 중단 요구

### 대통령 리더십 부족·정부정책 혼신 질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쇠신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 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 분열 등으로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은 끝을 모르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있고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며 “국민에게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출범 초기에 세계경제에 위기 경보가 울렸지만 이명박 정

부의 경제팀은 인지할 능력조차 없었다”며 “우리는 괜찮다”고 우기다가 ‘외환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오고 있다’며 몇 번을 오락가락했고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특히 “정부는 ‘5+2광역경제권’ 계획을 밀어붙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소속의 대부분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국토보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재정이 상당한 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실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등 서민과 중산층 보

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미국 공화당 정부의 실패를 통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1% 특권층을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안인 민주당의 부가세 30% 인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기업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해 차별 시정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대란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조건없는 재개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 등을 촉구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정 대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조건없는 재개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 등을 촉구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과 내각 전면 쇠신, 광역경제권 전면 수정 등을 핵심으로 한 연설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동아일보 사태, 中情이 주도”

### 진실위, 33년만에 진상 발표

1970년대 유신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언론탄압 사건으로 꼽히는 ‘동아일보사태’의 진상이 33년 만에 규명됐다.

진실·화해추진위원회(위·진실위)는 “박정희 유신정권은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롯한 각종 법률적 규제, 행정 조치로 언론자유를 제약했고 특히 중앙정보부는 직무법위를 벗어나 ‘동아사태’ 등 언론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진실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1974년~1975년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대형 광고주들을 남산 중앙정보부부서로 불러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동아연감 등에 내고 있던 광고를 취소하고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각서를 쓰게 했다.

또 소액광고주들에게도 중앙정보부 출두, 경찰 연행 조사, 세무사찰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 압력을 가했다.

중앙정보부는 또 광고를 다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핵심부서 5개 국장의 인사문제를 협의할 것과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사과하는 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고탄압은 경영 압박을 가함으로써 언론사 사주와 정부에 저항하는 기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사를 통제 가능

한 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진실위는 지적했다.

진실위는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에서도 언론인들이 상당수 해임되고 기자협회보가 강제 폐간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위는 “박정희 유신정권은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롯한 각종 법률적 규제, 행정 조치로 언론자유를 제약했고 특히 중앙정보부는 직무법위를 벗어나 ‘동아사태’ 등 언론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이에 따라 동아일보사와 피해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정당한 평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는 한편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관련 언론인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동아사태’는 지난 1974년 10월 23일 서울대학생 데모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던 당시 송건호 편집국장 등 동아일보 기자들이 중앙정보부부서 연행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다.

이에 반발한 동아일보 기자들이 다음날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자 일주일 만에 35개 중앙·지방언론사의 언론인들이 ‘언론자유’를 외치며 동참을 선언했다.

그러자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사에 광고 중단 압력을 가했고 사측은 1975년 3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언론인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했다. /연합뉴스

# 감사원 ‘인적 쇠신’ 불붙나

### 고위직 12명 사의 표명 이어 김황식 원장 고심중

### 쌀 국조 후 선별 처리...盧 정부 흔적 지우기 논란도

감사원 고위공직자 12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적쇄신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관급인 감사위원 6명 전원, 감사원 사무총장과 제1·2 사무차장 등 핵심 포스트 모두가 쌀지불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인적쇄신의 파괴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감사원 안팎에서는 3~4명 수준에서 감사위원 선별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감사위원 6명 중 지난해 쌀지불금 감사결과를 심의했던 의원은 4명으로 직·간접적으로 쌀지불금 사태와 연관이 있다.

게다가 김종신 위원은 임기가 내년 2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석형

위원의 경우 최근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논란으로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최소한 3~4명의 교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 임명된 박종구 위원을 제외하고 5명이 교체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감사위원 교체 범위에 따라 감사원 고위공직자들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관례상 감사위원은 감사원 내부 출신 3명(김종신, 박종구, 하복동 위원), 외부인사 3명(이석형, 김용민, 박성득 위원)의 형태로 구성된다.

내부출신 감사위원의 사의가 공식 수리될 경우 감사원 고위 공직자들의 연쇄 인사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12명의 일괄사의 표명 배경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감사위원은 박성득 위원 1명이고 나머지 5명 모두 참여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인적쇄신의 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 교체 수위가 결정되면 정치적 입장과 코드에 따른 ‘감사위원 물갈이’ 논란이 빚어질 게 연성도 다분하다.

하지만 청와대와 감사원 모두 이 같은 관측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감사원 고위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도 이러한 점을 감안한 듯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 원장은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아직까지 참음이 정해진 것은 없고,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盧, MB에 ‘봉하오리쌀’ 선물...靑은 떨떠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재배해 올해 첫 수확한 ‘노무현표 봉하오리쌀’을 청와대에 선물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노 전 대통령 내외의 이름으로 보낸 5

kg들이 ‘오리쌀’ 한 부대가 청와대로 배달됐다”면서 “사전에 예고없이 도착 놀랐다”고 말했다.

이 쌀은 노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 친환경 쌀작목반이 이른바 ‘오리농법’을 이용해 올해 재배한 것으로 지난 25일부터 현지 판매된 것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단 “보내준 쌀을 감사하게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소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배달된 쌀의 겉포장에 ‘보내는 분’으로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권양숙’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는 달리 ‘받는 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님’이라고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정가 브리핑

### 윤리위 설치 결의안 부결

○광주시 북구의회는 29일 제 1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이승희(진보신당·북구 가) 의원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부결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의 직권 남용과 품위유지 위반 등을 심사하고 징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4표, 반대 12표로 부결시켰다. 의원들은 “윤리위원회 설치 목적

에는 찬성하지만 윤리위의 심사 대상이나 사안을 특정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부결된 것으로, 요건을 다시 갖춰 언제라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공성진 의원, 3곳서 지명

○한나라당 광주지역 당원협의회가 가장 희망하는 현역 국회의원은 공성진(서울 강남구 을) 의원으로 나타났다.

29일 한나라당 광주시당에 따르

면 최근 추진중인 ‘명에 지역구 의원’제도 도입을 위해 지역 당원협의회별로 희망 의원을 조사한 결과, 공성진 의원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3곳에서 지명을 받았다. 이춘식(비례대표)·임태희(성남시 분당구 을)·조진형(인천 부평구갑) 의원 등도 희망 지역구의 원으로 꼽혔다. 전남도당도 최근 각 당원협의회별로 2명씩의 희망 의원을 신청, 중앙당에 신청했다.

명에 지역구 의원 제도는 호남 지역 등 현역 국회의원 없는 지역구에 현역 의원을 1명씩 의무적으로 배정,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주요 현안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

석유제품, 대한민국 수출품목 1위

에너지수출로 대한민국 경제에 힘이 되겠습니다

GS 에너지